

가고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 1도체

2015

방과후학교와 초등돌봄교실 위탁 운영 관련 학교장 및 업무담당자 연수

▣ 일시 : 2015. 5. 1.(금) 15:00~16:50

▣ 장소 : 전북교육문화회관 공연장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2015 방과후학교와 초등돌봄교실 위탁 운영 관련 학교장 및 업무담당자 연수 일정표

○ 일시 : 2015. 5. 1.(금) 15:00~16:50

○ 장소 : 전북교육문화회관 공연장

시간	소요 시간	내용	비고
14:30~15:00	30′	등록	균형발전·방과후팀 교육지원청
15:00~15:15	15′	국민의례 인사말	담당장학사 교육혁신과장
15:15~15:25	10′	2015년도 방과후학교 · 초등돌봄 정책 방향	이한규 장학관 (교육혁신과 균형발전·방과후담당)
15:25~15:55	30′	우리교육청 청렴정책 추진 방향 안내 및 청렴 의식 고취	차태정 주무관 (감사담당관 감사 1)
15:55~16:25	30′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교실 위탁 업무의 적법한 운영을 위한 안내	최선영 공인노무사 (행정과 노사협력)
16:25~16:45	20′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교실의 효율적인 민간위탁 운영 방안	담당장학사
16:45~16:50	5′	질의 응답 및 관련 사항 협의	담당장학사
16:50~		폐회	

차 례

CONTENTS

- ▣ 2015년도 방과후학교·초등돌봄 정책 방향 7
이한규(교육혁신과 균형발전·방과후담당 장학관)


- ▣ 청렴정책 추진 방향 안내 및 청렴의식 고취 15
차태정(감사담당관 감사1 주무관)

- ▣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교실 위탁업무의 적법한 운영을 위한 안내 · 45
최선영(행정과 노사협력 공인노무사)

- ▣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교실의 효율적인 민간위탁 운영 방안 53
업무담당자(교육혁신과 균형발전 · 방과후 업무담당자)

- ▣ 질의 응답 및 관련 사항 협의 63





2015 방과후학교 · 초등돌봄 정책 방향

이 한 규

(교육혁신과 균형발전 · 방과후담당 장학관)

2015 방과후학교·초등돌봄 정책 방향

이한규(교육혁신과 균형발전방과후담당 장학관)

I. 방과후학교 정책 방향

□ 방과후학교의 개념

-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와 선택을 반영하여, 수익자부담 또는 재정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정규수업 이외의 교육 및 돌봄 활동으로, 학교 계획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학교교육활동

□ 비전과 목적

- 학교교육기능을 보완하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경험의 제공을 통해 ‘미래 사회에 대비하는 창의인재 육성’에 기여

□ 목표

학교교육기능 보완 및 확대			
정규교육과정을 보완하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 경험 제공			
↕	↕	↕	↕
사교육비 경감	교육격차 완화	돌봄서비스 제공	지역사회연계 강화
예체능, 교과 등 관련 사교육 수요 흡수·대체	농어촌 및 도시 저소득층 자녀 지원 확대, 교육격차 완화	돌봄이 필요한 학생에게 돌봄서비스 제공	지자체, 대학 등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

□ 전략

- 학생과 학부모 중심의 단위학교 자율 운영과 지역사회와의 연계·협력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의 질 제고, 강사의 활동 여건 조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

□ 운영근거

- 초·중등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13-7호)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바탕으로 방과후학교 또는 방학 중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 방과후학교 편성·운영 원칙

- 학교의 장이 학교 여건과 학생·학부모의 요구를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를 거쳐 자율적으로 운영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학생·학부모의 선택에 의한 자율적 참여를 기반으로 운영
- 단위학교는 학기시작과 동시에 방과후학교 운영이 가능하도록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을 통한 방과후학교 연간 운영 계획 수립

□ 정보공개

- 단위학교는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한 정보를 해당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알 권리 충족 및 선택기회 보장, 예산 운영의 투명성 및 신뢰도 제고
- 단위학교는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지침에 따라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 및 운영·지원 현황을 연1회 공개

□ 방과후학교 운영 관련 청렴도 향상 노력

- 방과후학교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외부강사, 방과후학교소위원회 위원, 민간 위탁업체 등으로부터 청렴서약서를 받고 있음(2015 전북 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 120쪽 서식 참조)
- 교육지원청별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 설명회 시 학교장(교감), 업무담당자 대상으로 청렴교육 실시(2015. 3.~4.)
- 단위학교별로 외부강사 대상으로 방과후학교 운영 관련 청렴정책 홍보(2015. 4.~5.)
- 권역별 교육지원청 단위로 외부강사 대상 방과후학교 청렴정책 설명회 추진 (2015. 5.~6.)

□ 방과후학교 운영의 내실화

- (다양한 특기·적성 프로그램 운영)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한 특기·적성, 교과, 돌봄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운영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질 제고) 프로그램의 양적인 확대보다 프로그램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 높은 프로그램 운영
- (학습자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 요리 등 실생활 관련 프로그램, 전래놀이 또는 연극 프로그램 등 교육공동체의 문화 소양 교육 관련 프로그램 등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대학주도 방과후학교 사회적기업 및 공신력 있는 자원 활용) 대학주도 방과후학교 사회적기업 및 공신력 있는 지역 자원 활용으로 민간참여 기반 마련 및 학교의 업무 경감

□ 저소득층자녀 방과후자유수강권 지원

-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저소득층 등 자녀에 대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교육기회 확대에 따른 공교육 활성화 제고 및 계층 간 교육격차 완화
- (1인당 연간 48만원 지원) 저소득층 등 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등을 수강한 경우 1인당 연간 48만원 내외에서 지원(추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60만원까지 지원 예정)

Ⅱ. 초등돌봄교실 정책 방향

□ 초등돌봄교실 운영 방향

비전	학생·학부모가 만족하는 돌봄교실 운영
-----------	-----------------------------

주요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과 학부모 중심의 다양한 돌봄서비스 제공 ▶ 초등돌봄교실 안전 강화 및 인식 개선 ▶ 지역과 사회가 참여하는 돌봄교실 연계·위탁 강화
------------------	--

중점 추진 과제	
1	학년별 특성 및 학교여건에 따른 운영 다양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한 학생 대상 질 높은 돌봄서비스 제공 ▶ 3~4학년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 운영 ▶ 수요에 따른 운영시간 조정 등 탄력적 운영
2	학생과 학부모 중심 운영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의성 함양을 위한 무상프로그램 운영(1일 1시간(40분) 정도) ▶ 서비스 다양화를 위한 수익자부담 운영 원칙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연계 운영 등
3	돌봄교실 안전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녁돌봄 안전관리 및 귀가 안전 강화 ▶ 방학 중 운영 지원 ▶ 급·간식 안전관리 강화
4	우수하고 다양한 인력 활용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전담인력 전문성 제고 ▶ 교사대생 봉사활동 활용 강화 ▶ 교육기부 활용 등 확대
5	지역기관과의 연계 및 홍보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기관 등과 연계 및 위탁 ▶ 우수사례 및 홍보자료 개발·보급 ▶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 개정·보급

□ 대학생 봉사활동 동아리단 운영 지원 및 매칭

- 도시 외각지역 등 보조인력이 특히 필요한 학교에 대학생 교육기부단을 활용한 돌봄교실 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 강화
 - ※ 학기 및 방학중 사업으로 구분하여 대학생 동아리단 활동 지원(세종시교육청 주관, 한국과학창의재단위탁, 특교 약 5억 활용)
- 교육부 및 한국창의재단이 모집한 돌봄교실 대학생 동아리단 운영 희망학교 모집 및 매칭
 - 동아리단의 활동 희망지역(읍·면·동범위까지)을 교육부에서 교육청에 송부하고 이를 토대로 교육청에서는 희망학교 선정 후 교육부에 통보

□ '15년 지역돌봄기관간 연계 강화

- 학교 및 지역돌봄기관 간 153개 권역별 협의회 운영
 - ※ 권역별 협의회란? 읍·면·동 단위 지역 돌봄기관(학교,지역아동센터,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간 협의회
- 돌봄기관간 연계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및 강사 공유, 학부모 대상 안내자료(공동수요조사시 활용) 개발·보급, 상호방문의 날 운영, 학부모 대상 공동설명회 개최, 돌봄교실 위탁 운영 및 시간대별 연계 운영 등 지역 여건에 맞는 권역별 협의회별 특색있는 사업 추진
- 권역별 협의회별 중점학교로 지원(214,200천원/권역별 협의회당 1,400천원 정도)
 - ※ 권역별 규모 및 여건에 따라 차등 지원
 - 돌봄기관간 연계 활성화를 위한 권역별 특색있는 사업 추진 경비로 다양하게 편성·운영(업무추진비로 40% 이내로 편성)

청렴정책 추진 방향 안내 및 청렴의식 고취

차 태 정
(감사담당관 감사 1 주무관)

청렴도 결과와 부패방지 제도

차태정(감사담당관 감사 1 주무관)

청렴도 결과와 부패방지 제도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포함)

전라북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
차태정

목 차

- I 부패와 청렴
- II 전라북도교육청의 청렴수준
- III 부패방지 제도

I . 부패와 청렴

3

I . 부패(腐敗)와 청렴(淸廉)

❖ 부패란

- 사전적 의미
개인이나 집단이 도덕적, 정신적으로 타락함
- 일반적 의미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재물, 지위, 기회 등과 같은 사회적 이득을 얻거나 다른 사람이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일탈적 행위

I . 부패(腐敗)와 청렴(清廉)

■ 법률적 의미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 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위의 두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I . 부패(腐敗)와 청렴(清廉)

❖ 청렴이란

■ 사전적 의미

성품과 행실이 맑고 깨끗하며 재물 따위를 탐하는 마음이 없음

■ 소극적 의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청렴의무를 준수하는 행위

I. 부패(腐敗)와 청렴(清廉)

■ 적극적 의미

의사결정과정을 비롯한 행위의 과정, 결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투명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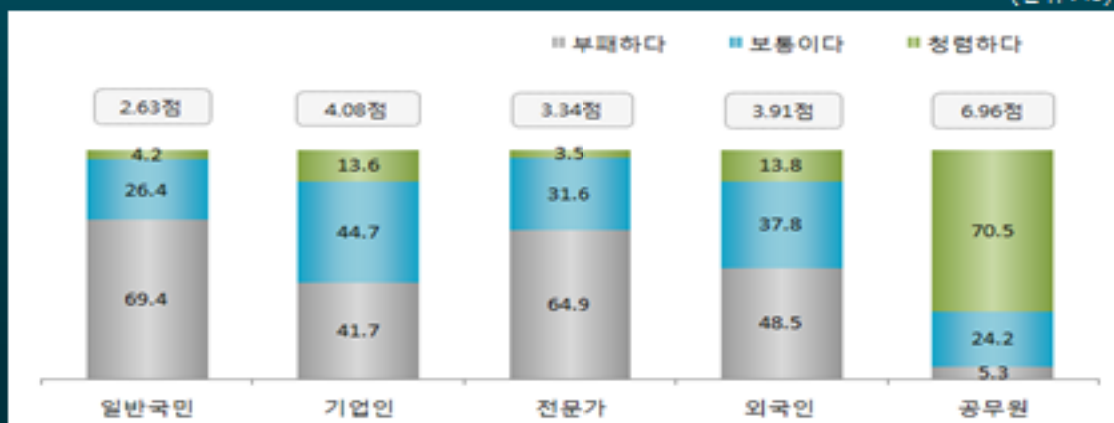
공직자가 직업윤리기준에 따라 대민행정을 실시하고 성과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책임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장

청렴(清廉)은 **정의감을 근간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공정성·투명성·책임성 등 바람직한 가치를 실천하는 적극적 의미의 행동기준**

I. 부패(腐敗)와 청렴(清廉)

행정분야에 대한 국민의 부패인식도(2014. 국민권익위원회)

(단위 : %)



2014. 부패인식도 조사에서 국민의 69.4%가 공직사회가 부패하다고 인식하는 반면 **공무원의 5.3%**만이 공직사회가 부패하다고 대답



청렴 = 무능? 유능!!!



❖ 청소년의 도덕성과 지능에 대한 실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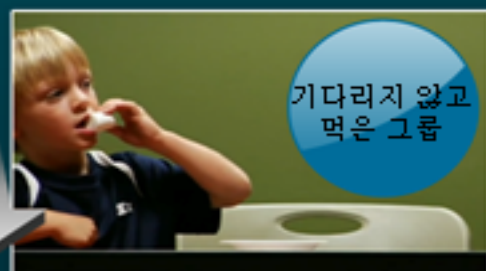


미국 스탠포드 대학 윌터 미셸 박사의 마시멜로우 실험

“여기 마시멜로우를 당장 먹어도 좋지만,
돌아올 동안 참고 기다리면 한 봉지를 더 줄게”



참고 기다린
그룹



기다리지 않고
먹은 그룹

15년 후

언어 610점
수학 652점

SAT 평균
210점 차이

언어 524점
수학 528점

도덕성 ➡ 자기 통제와 만족 지연 ➡ 자제력 ➡ 청렴

❖ 개인의 경쟁력과 청렴

미국 41명의 대통령을 심층분석 평가한
〈미국대통령 평가보고서〉



5대 경쟁력 평가 순위 = 도덕성 평가 순위
힘과 용기, 능력, 지혜의 뿌리는 **정직**과 **청렴**에 있다!

청렴 선진국의 모습은? (뉴질랜드 사례)

1.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국가조직
 - 중대부정사건 수사국(SFO)
2. 청렴에 대한 높은 시민의식
 - 총리가 탑승한 차량 과속 신고(시민)
 - 운전사, 경호원 재판회부, 벌금형
3. 강력한 반부패 단속규정
 - Zero Tolerance, 사소한 규칙위반에도 관용은 없다
4. 세계 최고수준의 청렴도 유지 비결-시사점
 - 사소한 법이라도 존중하는 국민성
 - 부정부패 노력하는 국가기관에 보내는 국민의 신뢰



Ⅱ. 전라북도교육청 청렴수준

13

Ⅱ. 전라북도교육청 청렴수준

2014년 전라북도 청렴도 측정 결과

구분	종합청렴도 (100%)	외부청렴도 (60.1%)	내부청렴도 (25.0%)	정책고객 (14.9%)
2014년	7.73 (3위)	7.83 (6위)	8.05 (2위)	7.11 (2위)
2013년	7.47 (4위)	7.85 (9위)	8.00 (3위)	6.70 (5위)
2012년	7.35 (3위)	7.90 (4위)	8.09 (3위)	5.88 (5위)
시도교육청 평균	7.23	7.69	7.83	6.38
전체기관 평균	7.86	8.09	7.93	6.95

II. 전라북도교육청 청렴수준

❖ 2014년 외부 청렴도 측정 결과

구 분		2014년	2013년	증(△)감	
종합청렴도		7.73	7.47	0.26	
외부청렴도	점수	7.83	7.85	△0.02	
	부패지수	부패직접경험	7.80	7.26	0.54
		부패간접경험	2.55	5.14	△2.59
		부패인식	8.49	8.09	0.30
	부패위험지수	투명성	8.07	7.94	0.13
		책임성	8.22	8.16	0.06

15

II. 전라북도교육청 청렴수준

❖ 2014년 내부 청렴도 측정 결과

구 분		2014년	2013년	증(△)감	
종합청렴도		7.73	7.47	0.26	
내부청렴도	점수	8.05	8.00	0.05	
	청렴문화지수	점수	8.15	8.17	△0.02
		조직문화	8.56	8.63	△0.07
		부패방지제도	7.44	7.39	0.20
	업무청렴지수	점수	7.97	7.87	0.10
		인사업무	8.38	7.85	0.53
		예산집행	8.26	8.28	△0.02
		업무지시공정성	6.86	7.29	△0.43

16

II . 전라북도교육청 청렴수준

❖ 2014년 정책고객 평가 결과

구 분		2014년	2013년	증(△)감
종합청렴도		7.73	7.47	0.26
정책고객평가	점수	7.11	6.70	0.41
	부패인식	7.37	6.70	0.67
	부패통제	7.25	7.05	0.20
	부패경험	7.06	6.12	0.94

17

II . 전라북도교육청 청렴수준

❖ 2013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 총 취득점수 : 86.12점(2012년 85.70점 대비 0.42점 상승)
※ 시도교육청 평균 81.6점, 최고점 90점(대전광역시교육청)
- 평가등급 : II 등급(2012년 II 등급, 2011년 IV등급)
※ I 등급(매우우수), II 등급(우수), III 등급(보통), IV 등급(미흡), V 등급(매우미흡)

18

II. 전라북도교육청 청렴수준

❖ 청렴한 기관의 모습

- ✓ 인사운영 투명성 : 근평, 성과평가, 승진 만족도 향상
- ✓ 예산 운영의 투명성 : 수의계약, 업무추진비 등 공개
- ✓ 업무 효율성 증대 : 부당한 업무지시 해소, 수평적 조직 문화

❖ 청렴하지 못한 기관의 모습

- ✓ 공평하지 못한 인사 운영 : 인사청탁 만연 → 조직 물신 팽배
- ✓ 불투명한 예산운영 : 계약, 특혜, 연고 관계 비리 만연
- ✓ 비리 증가 : 조직내 청렴 물감증 만연 → 금품수수 관행에 따른 부실 행정 초래

III. 부패방지 제도

선물 I

선물

선물 II



III. 부패방지 제도(공무원 행동강령)

❖ 행동강령 (Code of Conduct) 이란?

❖ 강령은

특정 조직(집단)이 지향하고 있는 바람직한 가치를
행위 유형별로 명문화한 것

❖ 공무원 행동강령은

강령을 공직사회에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직무수행
과정에 당면하는 갈등 상황에서 공직사회가 추구하는
바람직한 가치기준 및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

II. 부패방지 제도(공무원 행동강령)

❖ 공무원 행동강령의 필요성

- ✓ 공무원의 역할과 중요성 증대
- ✓ 공무원의 상징성과
- ✓ “절제된 사생활의 원칙” 적용
- ✓ 공무원의 바람직한 행동의 방향과 원칙 제시
- ✓ 부패발생 가능성의 사전 예방
- ✓ 공무원의 윤리성과 정부의 신뢰성 제고
- ✓ 거래비용 절감과 저비용 고효율의 시스템구축

Ⅲ. 부패방지 제도(공무원 행동강령)

❖ 법적 근거

- ✓ 공무원 행동강령 [대통령령, 2003.2.18.제정]
- ✓ 전라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교육규칙, 2003.5.16.제정]

❖ 제정 목적

- ✓ 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지켜야 할 구체적 행위 기준 제시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윤리기반 확립
- ✓ 접대문화 · 연고중시, 공사구분 모호 등 관행적 부패 고리에 대하여 직무수행을 위한 구체적 행위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부패 가능성을 사전에 해소하고 **정당한 공직자 보호장치 마련**

Ⅲ. 부패방지 제도(공무원 행동강령)

구성

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경우, 상대방이 되는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직자에 대하여 지켜야 하는 행위기준을 규정

공정한 직무수행

-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지시 처리
-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 특혜의 배제
-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 정치인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 인사청탁 등의 금지
- (투명한 회계 관리)

부당이득 수수금지

- 이권개입 등의 금지
-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 알선 · 청탁 등의 금지
- 직무관련 정보 이용 거래 등의 제한
-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 금품 등 받는 행위 제한
- 금품 등 주는 행위 금지

견전한 공직풍토 조성

- 외부감의 등의 신고
- 금전의 차용 금지 등
- 경조사 통지 및 경조금품 수수제한

부패방지 제도 주요 개정내용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 주요내용]

3-1. 개정 내용

- ❖ 공무원 소관 업무와 관련된 ‘직무관련자’의 범위 확대(제2조)
 - 우리교육생 소속 법인 및 법인 소속 업무담당자
- ❖ 행동강령책임관이 부당한 업무지시를 한 경우 상급기관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가능 조항 신설(제4조제2항)
- ❖ 부당지시의 판단기준 및 부당지시 불이행 공무원 보호 조항 신설(제4조제5,6항)

3-2. 개정 내용

❖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상담 의무 화 대상 확대(제5조)

- 자신과 300만원 이상 금전거래가 있는 자
- 우리행 소속기관의 퇴직공무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
- 학연·지연 또는 종교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는 경우
- 최근 2년 이내 인·허가, 계약체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는 경우
- 자신이 직면에 수행하였던 업무에 대한 직무감사를 수행할 경우

3-3. 개정 내용

❖ 청탁등록센터에 등록한 경우 알선·청탁을 거절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 신설(제11조)

❖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 신설(제14조)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의 청렴의무 위반 처리기준을 구체화)

예) 300만원이상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을 수수하고 위반·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파면”

❖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 품 등을 주는 행위 금지 조항 신설(제14조제2)

3-4. 개정 내용

- ❖ **직무관련자와 사적인 접촉 제한 규정 신설(제14조의 3)**
 - 골프, 사행성 오락, 여행을 하거나 직무관련자가 주관하는 외압(행사)을 함께 하는 것—부득이한 경우 사전신고 또는 사후신고
- ❖ **직무관련 강의·강연의 대가 상한기준 신설(제15조)**
 - 공무원 외부강의 대가기준 시행 및 관리강화방안(감사담당관—7866, 2012.9.12)
- ❖ **단설유치원의 행동강령 책임관 지정 및 행동강령 책임관 업무를 사무분장에 포함하도록 함(제23조)**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 개정내용

1. 개정 이유

- ❖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개정
[대통령 훈령, 2014.7.29]
-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
- ❖ 감사원 감사결과 시·도교육청 「비위사건 처리기준」 개정 요구
- ❖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행위자에 대한 제재 강화 권고

2-1. 개정 내용

- ❖ 수사기관의 “**영의없음**” 또는 “**짜가안됨**”의 결정 사안이라도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처분
- ❖ 수사기관의 “**공소권없음**” 결정 통보한 비위사건에 대한 처분 기준 구체화
 - 신고죄·반의사불벌죄 비위, 사회적 불의가 야기된 비위의 경우 품위유지 위반에 해당시 징계의결 요구
 - 단순 교통사고 (8주이상 상해 제외)의 경우 내부종결 처리하되 기관장 자체 교육 실시

2-2. 개정 내용

❖ 비위사건 처리기준 비위유형 신설

- 학생 성적 관련 비위 및 학교생활기록부 부당 평정
- 신규채용, 특별채용, 승진 등 인사 관련 비위
- 학생에 대한 상습적이고 심박한 신체적 폭력

❖ 부패공직자에 대한 처리기준 강화

- 100만원 미만 공금횡령 : 경쟁제 의결 요구
(50만원 미만 공금횡령 : 경고 → 경쟁제 의결 요구)
- 100만원 이상 공금횡령 · 의례적인 금품 · 양응 수수 : 중징계 의결 요구

2-3. 개정 내용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반영

- 교통사고 후 도주, 무면허운전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구약식(벌금형) 처분 받은 경우 : 경쟁제 의결요구 또는 경고 → 경쟁제 의결요구

❖ 음주측정 불응에 대한 처분기준 명시

- 경쟁제 의결 요구 또는 경고 ~ 중징계 의결 요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출처 - 참여연대 자료)

37

2015. 3. 3 국회를 최종 통과한

김영란법 그것이 알고싶다



"이 법을 제가 처음으로 제안해서
김영란법이라 불리고 있죠"

김영란 / 전 대법관, 전 국민행복위원회장

38

김영란법이란?
**불법로비나 접대 등
 부정부패를 막아
 깨끗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법입니다**

본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의 적용 대상은

공무원

국가 및 지방공무원, 국회의원, 판검사 등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한국전력공사, 국민연금공단, 해운조합 등

교사 및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국공립학교, 사립학교, 유치원 등

언론사 기자 및 직원

공영방송 및 민간방송사·신문사

**'공공의 이익'에 영향을 주는
 분들이죠**

그럼 이 분들에게 금지된
두 가지 일은?

1. 부정청탁 금지

부정한 청탁은 해서도,
들어주어서도 안돼요!

이게 다 부정청탁이에요

법령을 위반하여 공직자에게

1. 인허가·면허 등을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2. 각종 행정처분이나 형벌을 감경·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3. 채용·승진 등 공직자의 인사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4. 심의·의결 등의 권한을 가진 위원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5. 공공기관의 수상·포상 등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6. 입찰·시험 등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7. 특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8. 정부의 각종 지원금 배정 등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9. 특정인이 입감·용역 등을 사용하거나 독점하도록 하는 행위
10. 학교의 입학·성적 등의 업무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1. 질병검사·부대배치 등 병역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2. 공공기관의 평가·판정 등을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3. 단속·감사 대상에서 특정인을 배제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는 행위
14. 수사·재판 등에 개입하도록 하는 행위
15. 1-14에 대해 권한 밖의 일을 하도록 하는 행위

* 일반적인 민원, 공익적 목적의 건의나 제안은 제외

부정청탁시 처벌 받아요

부정청탁을
받고 실행한
공직자



형사처벌

부정청탁을
한 사람



과태료

2. 금품수수 금지

돈이나 선물을
1회 100만원 넘게
받으면 안돼요!

이게 다~ 금품이에요

돈, 선물, 부동산,
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골프, 술(접대),
교통·숙박 제공,
빚 면제, 일자리 제공 등

* 일정범위 내의 경조사비나 선물, 회사의 격려금 등은 제외

대가성과 관계없이 금품수수시 처벌 받아요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1회 100만원 또는
1년 3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은 공직자



형사처벌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1회 100만원 또는
1년 300만원 **이하**
금품을 받은 공직자



과태료

* 단, 금품을 받더라도 돌려주거나 신고하면 처벌 안됨

7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서 가족의 금품수수도 처벌 받아요

가족이

1회 100만원 또는
1년 3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거나
반환하지 않은 공직자



형사처벌

가족이

1회 100만원 또는
1년 300만원 **이하**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거나
반환하지 않은 공직자



과태료

* 가족은 공직자의 배우자만 해당

45

**그렇다면 김영란법에 대한
국민의 공감도는?**



*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 JTBC, 2015. 1. 9

**이제 그 지긋지긋한
떡값검사 벤츠검사
스폰서검사
촌지 뒷돈
술접대 골프접대...**

**김영란법으로
다 막을 수 있어요**

- ❖ 대상 :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교원, 사학법인 및 임직원, 공사립유치원, 언론인
- ❖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의 금지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 금지, 공직자 등이 거절, 기관장에 신고 : 직무관련자 등에 과태료 부과, 부정청탁 이행 공직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공직자등의 금품등의 수수 금지
 - 공직자등이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연 300만원 초과 금품 수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원이하의 금품 수수 : 해당 금품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51

엽기소방관 동영상

Um novo vídeo todo dia!



Bacaninha

<http://www.bacaninha.com.br>

청렴은 선택이 아닌 ‘공무원의 의무’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1조 (친절·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3조 (청렴의 의무)

- ①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 ②공무원은 직무상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사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청정 전북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교실 위탁업무의 적법한 운영을 위한 안내

최 선 영
(행정과 노사협력 공인노무사)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교실 위탁업무의 적법한 운영을 위한 안내

최선영(행정과 노사협력 공인노무사)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교실 위탁업무의 적법한 운영을 위한 안내

2015. 5. 1.

공인노무사 최선영

위임 · 도급의 의미

위임(위탁)

민법 제680조에 의하여 위임인이 수임인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되며, 수임인은 도급과 달리 일의 완성이 아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함.

도급

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도급인은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민법 제664조)으로 수급인 스스로의 재량과 책임 하에 자기가 고용한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을 완성하는 것을 의미

도급 · 위임의 의미

‘근로자파견’은 사용사업주의 지휘 · 명령을 받는다는 점에서
고용사업주(또는 수급임, 수임인)의 지휘 · 명령을 받는

‘도급’ · ‘위임’ 등과 차이가 있습니다.

※ 도급 · 용역 · 위임은 타인의 노무를 이용하는 계약의 형식은 도급, 용역,
위탁, 사내하청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지만 그 법률적 의미는 도급 또는 위임으로
귀결됨.



2

근로자 파견의 의의

근로자 파견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 · 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



3

도급과 파견의 구별



파견법은 파견근로자 보호를 위해 근로자파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하여 파견허용대상업종에 한해서만 파견업을 행할 수 있고, 사용사업주 또한 파견허용대상업종에 대하여 파견업 허가를 받은 파견사업주와 파견계약(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음)을 맺고 역무를 제공받아야 함

파견법을 위반하여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벌칙을 받게되며,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 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함

4

근로자파견대상업종(파견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관련)

한국표준 직업분류	대 상 업 무	비 고	한국표준 직업분류	대 상 업 무	비 고
120	컴퓨터관련 전문기술 업무		317	사무 지원 종사자의 업무	
16	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기술 업무	행정 전문직(제1차) 업무 제외	318	도색, 우편 및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17131	특수 전문기술 업무		3213	수문 및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181	지속 보관원, 사적 및 공권 전문기술 업무	사적(18120)의 일부를 제외	3222	전화교환 및 번호안내 사무 종사자의 업무	전화교환 및 번호안내 사무 종사자의 일부가 당의 시설에 확립 일어난 경우를 제외
1822	번역가 및 통역가의 업무		323	고객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183	장학 및 공연예술가의 업무		411	경인보호 및 관련 종사자의 업무	
184	영화, 연극 및 방송관련 전문기술 업무		421	음악 조직 종사자의 업무	「공연진흥법」 제42조에 따른 관광 숙박업주 조직이 일부를 제외
220	컴퓨터관련 준전문기술 업무		432	여행안내 종사자의 업무	
23219	기타 전기공학 기술공의 업무		61208	주유원의 업무	
23221	통신 기술공의 업무		61209	기타 소매업계 판매원의 업무	
234	제도 기술 종사자, 제도 프로그래머 업무		621	전화통신 판매 종사자의 업무	
236	영화 및 전자영상 기술 종사자의 업무	비디오제작에 관한다. 영상제작(23236)과 사진(23237), 기타 비록업에 TV (23238)의 일부를 제외	842	자동차 운전 종사자의 업무	
262	정규교육원의 교육 준전문기술 업무		9112	건물 청소 종사자의 업무	
263	기타 교육 준전문기술 업무		91221	수리 및 정비원의 업무	「경제발전법」 제42조에 따른 경제개발을 제외
28	예술, 연예 및 경기 준전문기술 업무		91225	주거장 관리원의 업무	
291	관리 준전문기술 업무		913	해물, 요반 및 경관 관련 종사자의 업무	

5

도급과 파견의 구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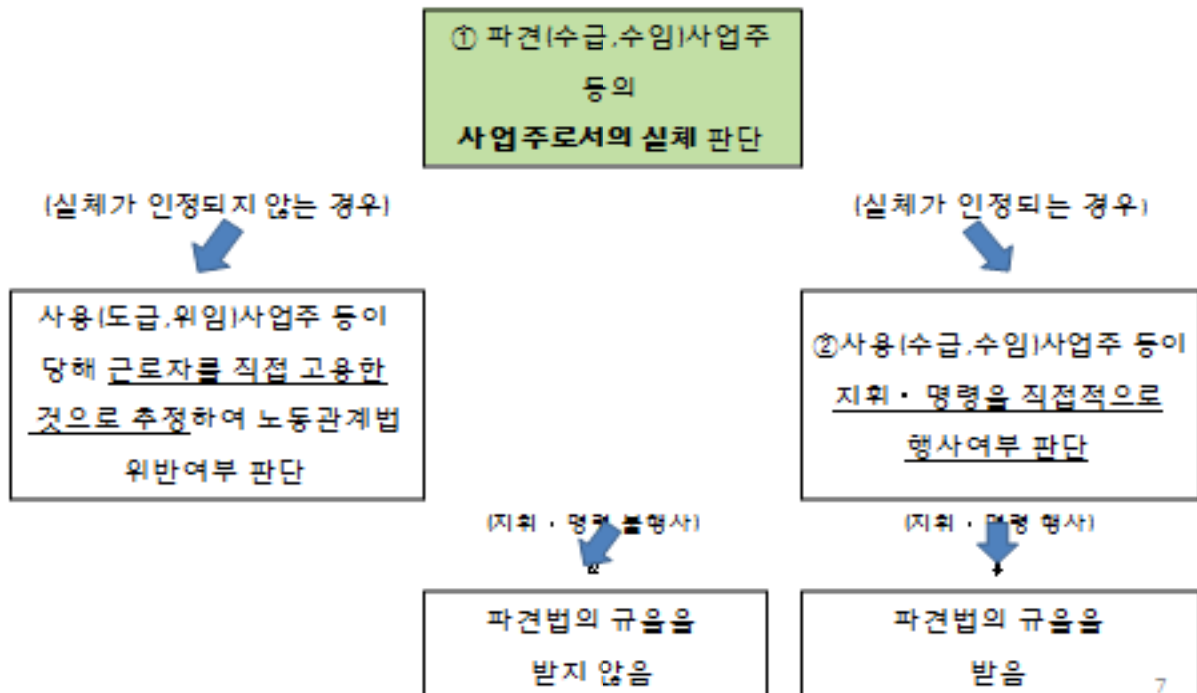
구분	근거	공동점	차이점	노동법상 사용자 책임
도급 (위임)	민법	근로자의 노무제공의 경제적 이익이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닌 <u>사용사업주</u>	<u>수급인</u> 이 자신의 근로자에게 직접 지휘명령 업무수행	수급인
파견	파견법	또는 <u>도급인(위임인)</u> 이라는 제3자에 게 귀속	<u>사용사업주가</u>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휘명령 업무수행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 도급에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상의 지휘·명령권을 행사 불가

-만약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상의 지휘·명령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그 계약의 명칭·형식 등이 도급계약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의 운영이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지휘·명령하는 것)과 같은 것이 되어 파견법의 규율을 받게 됨

도급과 파견의 구별 판단기준



판단기준

구 분	판 단 지 표
① 파견사업주등에 대한 사업주로서의 실체 판단	채용, 해고 등의 결정권
	소요자금 조달 및 지급에 대한 책임
	법령상 사업주로서의 책임
	기계, 설비, 기자재의 자기 책임과 부담
	전문적 기술, 경험과 관련된 기획 책임과 권한
② 사용사업주등의 지휘·명령에 대한 판단	작업배치, 변경 결정권
	업무 지시, 감독권
	휴가, 병가 등의 근태 관리권 및 징계권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권
	연장, 휴일, 야간근로 등의 근로시간 결정권 (다만, 작업의 특성상 일치시켜야 하는 경우는 제외)

8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교실의 효율적인 민간위탁 운영 방안

(교육혁신과 균형발전 · 방과후 업무담당자)

I. 방과후학교 민간위탁 운영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민간위탁 점검

○ 민간업체와 위탁계약 체결 시 ‘필수 제출서류’ 확인

- ① 공모신청서
- ② 법인 또는 업체의 일반현황
- ③ 정관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단체의 경우)
- ④ 위탁운영 제안서
- ⑤ 법인(업체)의 국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미납세금 확인)
- ⑥ 법인(업체)의 국세 납세사실증명 및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 ⑦ 인감증명서
- ⑧ 참여강사 관련 자료
 - i) 참여강사 보유 현황
 - ii) 참여강사 학력증명서 및 교과목 증명서 사본
 - iii) 참여강사 고용계약서
 - iv) 참여강사 4대보험 가입 내역서(계약시 제출 가능)
 - v) 참여강사 활동 이력서(경력증명서)
 - vi) 참여강사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 vii) 참여강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viii) 참여 원어민강사 비자 사본(비자 종류 및 유효기간 명시)
 - ix)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
- ⑨ 청렴서약서

○ 제출서류 적격 및 자격 충족여부 검토·심의 내용

- ① 서류에 방과후학교 관련 사업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 (영리, 비영리)법인의 경우 : 정관(정관의 내용), 사업자등록증
 - (영리, 비영리)단체 : 사업자등록증
- ② 영리 및 비영리 여부 보다 프로그램 질 등을 우선적으로 검증

- ③ 비영리법인(민간단체)의 경우 설립 목적, 운영 내용 등의 적합성 및 수강료의 적정성 등
- ④ 영리법인(단체)의 경우 설립 목적, 과세 실적, 운영 내용 등의 적합성 및 수강료의 적정성 등
 - 국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통해 미납세금이 있는지 검토
- ⑤ 강사 관리계획 등을 면밀하게 검토
- ⑥ 참여강사에 대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통해 결격여부 확인
- ⑦ 외부교재(단가 포함)에 대한 적정성
- ⑧ 국세 납세사실증명 및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를 통해 유령 법인(업체) 인지 검토
- ⑨ 시설기부(프로그램 포함)를 조건으로 하는 위탁계약(계약 불가) 여부

□ 수강료 정보 공개 등을 통한 방과후학교 운영의 형평성 고려

- 학교와 교육지원청 방과후학교지원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관내 학교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별 수강료 등 방과후학교와 관련된 종합적인 정보제공
- ※ 동일한 위탁업체와 동일한 조건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같은 수강료 지급

□ 기타 사항

- 방과후학교 정보공시 항목 중 방과후학교 ‘참여 학생 수’는 실제로 참여한 학생 수(단수 계산) 기준으로 공시
- 수익자부담의 경우 수용비에서 시설 사용료 및 보조인력 인건비 지급 가능
 - 수용비에서 정규교직원 관리수당 지급 금지
- 방과후강사 결격사유 조회
 - 방과후학교 강사는 “초·중등교육법” 제 22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강사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학생 보호 및 강사의 교육적 자질 등을 고려하여 결격사유 조회를 권장함
- 방과후학교 컴퓨터교육 운영 시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 방과후학교 수업교재 할인은 정가의 10%이내에서 가능

- 제22조(간행물 정가 표시 및 판매) ① 출판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간행물을 발행할 때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이하 "정가"라 한다)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간행물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4.5.20.>
- ② 발행일부터 18개월이 지난 간행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가(定價)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가표시는 제1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4.5.20.>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출판물의 경우에는 출판사가 정가를 서지정보에 명기하고 전자출판물을 판매하는 자는 출판사가 서지정보에 명기한 정가를 구매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판매사이트에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6., 2014.5.20.>
- ④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이를 정가대로 판매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독서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정가의 15퍼센트 이내에서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자유롭게 조합하여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가격할인은 10퍼센트 이내로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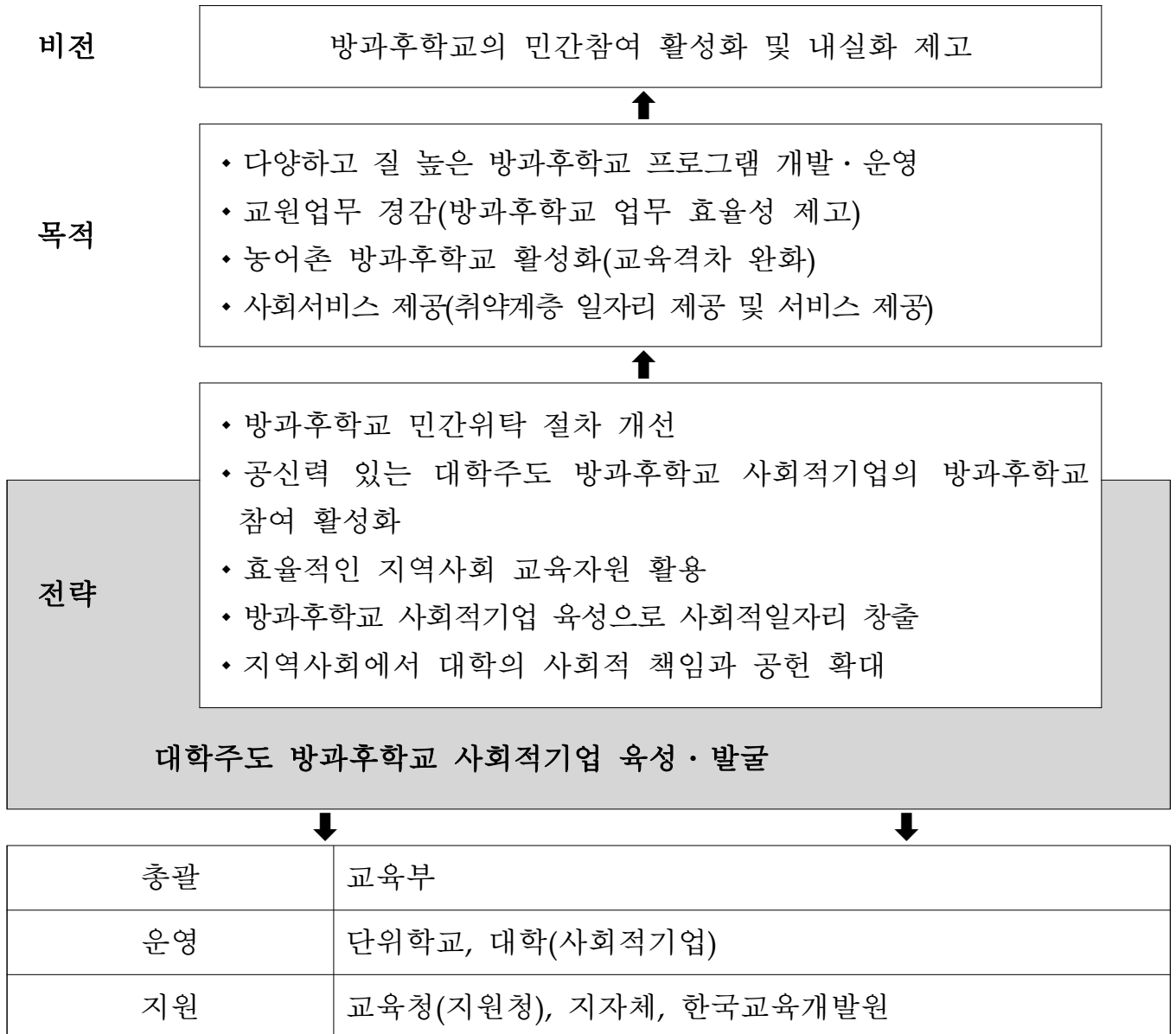
○ 방과후학교 운영 시간 관련 안내

- 방과후학교는 학생·학부모의 요구와 단위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단위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운영하며, 토요일, 휴업일, 방학 중에도 운영할 수 있음
- 단위학교는 학생의 건강이나 학교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않도록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정규수업 이전 또는 늦은 시간까지 운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Ⅱ. 대학주도 방과후학교 사회적기업 위탁 운영

1 대학주도 방과후학교 사회적기업을 통한 방과후학교(돌봄교실) 운영

□ 대학주도 방과후학교 사회적기업 운영 비전·목적·전략



□ 참여 주체별 역할 분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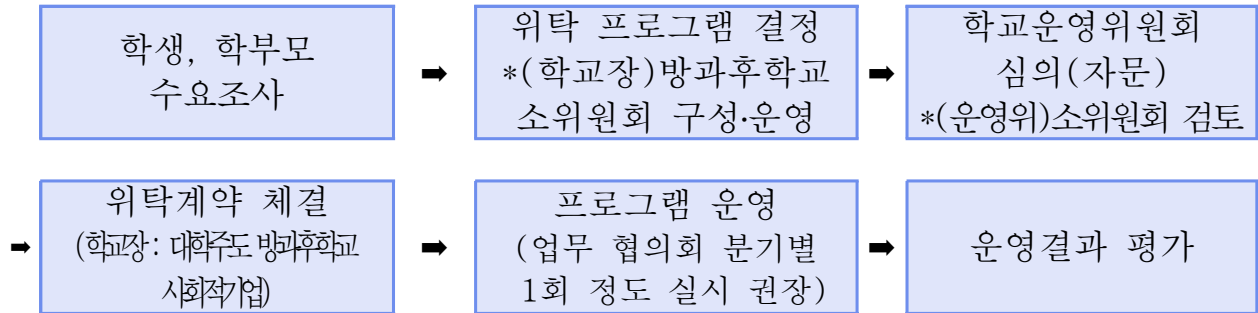
기관	역 할
대학 (사회적기업)	○ 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예산지원(사업 운영을 위한 대응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사 연수 및 행정업무 지원 - 사업운영 모니터링 - 사회적기업 관리·감독 <p>○ 사회적기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위학교와 위탁 계약체결 및 사업운영 - 강사 선발 및 관리 - 사업운영성과 평가 및 피드백 <p>※ 프로그램 및 강사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단위학교에 제공</p>
단위학교 (초·중·고 및 특수학교)	<p>○ 수요조사</p> <p>○ 방과후학교 소위원회 구성·운영(임의 사항)</p> <p>○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p> <p>○ 프로그램 홍보 및 안내</p> <p>○ 민간위탁 계약체결</p> <p>○ 수강료 관련 행정처리</p> <p>○ 평가·피드백(프로그램 및 강사 만족도)</p>
교육청 (지원청)	<p>○ 도교육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주도 방과후학교 사회적기업 협의체 구성 및 지원 - 대학주도 사회적기업 운영지침 수립 - 대학주도 방과후학교 사회적기업 예산 지원 및 감독 - 사회적기업 사업설명회 개최 등 사업 홍보 <p>○ 지역교육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위학교 지도·감독 및 운영현황 조사 - 예산사용 지도·감독(도교육청 협조) - 사회적기업과 단위학교 간 연계 지원 - 사회적기업 사업 설명회 개최 지원
지자체	<p>○ 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등)</p> <p>○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 및 컨설팅</p> <p>○ 지자체의 교육관련 사업과 연계</p>
한국교육 개발원	<p>○ 사업운영기관 선정</p> <p>○ 대학주도 방과후학교 사회적기업지원단 운영(지도점검 및 컨설팅 등)</p> <p>○ 운영성과분석 및 평가</p> <p>○ 예산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p>

□ 단위학교 업무처리 흐름도

단계	주요 내용	비고
준비	○ 사전수요조사 및 분석 ○ 방과후학교 (연간) 운영 계획 수립 ▶ 위탁운영 여부 검토 등	11~12월
↓		
검토 · 심의	○ 방과후학교 (연간)운영 계획 심의·자문 (학교운영위원회) ▶ 대학주도 방과후학교 사회적기업 위탁운영 여부 ▶ 방과후학교 소위원회 조직 구성여부 ※ 공모절차 생략(2015학년도에 한함)	11~12월
	○ 위탁업체의 운영 계획서 검토·심의 (소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 ▶ 방과후학교 소위원회 구성 시 1단계) 위탁희망업체 검토(소위원회) 2단계) 소위원회 검토결과 심의(학교운영위원회) ▶ 방과후학교 소위원회 미구성 시 - 위탁희망업체 검토·심의(학교운영위원회)	1~2월
↓		
선정 · 계약	○ 위탁 운영 계약 선정 및 계약 체결(학교의 장) ▶ 계약서 작성 및 상호 합의 ▶ 계약 시 필요한 서류 구비 및 확인	2월
↓		
운영 · 평가	○ 수강 신청 및 프로그램 운영 ▶ 수강신청 및 프로그램 홍보 ▶ 교육활동 전개 및 학생관리(사회적기업) ○ 관리 ▶ <u>계약 이행 상황 확인 및 모니터링(학교)</u> ▶ 예산 집행(사회적기업, 학교) ○ 운영 평가 ▶ 만족도 조사 ▶ 자체평가 및 분석 ○ 결과 공개 및 환류	2월 ~ 학교

□ **운영 방법** 【 단위학교 업무 수행 흐름 】



* 학교장 및 학교운영위원회는 필요시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음

□ **계약 관련 사항**

▶ **계약 세부사항 참고** ◀

(계약 방법) 전체 위탁방식, 부분 위탁방식

(계약 영역)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운영(전체, 부분), 돌봄교실 운영(오후돌봄, 저녁돌봄), 여름, 겨울방학 특화 프로그램 운영(1달 정도의 방학 특별 프로그램 등)

(계약 기간) 계약 기간은 6개월이 원칙이나, 프로그램이 변동되지 않은 경우 6개월을 연장 계약하여 운영할 수 있음(최장 1년)

(계약 전 준수사항) 대학주도 방과후학교 사회적기업에 위탁할 경우에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함.

- *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추진할 경우는 교육지원청 소속 방과후학교 관련 심의 기구(교육지원청 단위 관리 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침
- * 공문 접수와 함께 신청이 완료되며 별도의 공모절차 불필요
- * 강사의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는 단위학교에서 해야 함

(프로그램 운영비 지급방법) 위탁 운영시 프로그램 운영비는 프로그램별 특성을 고려하여 매 월말 지급방식, 월초 선 지급방식 등을 선택하여 지급 할 수 있음 (단, 선 지급 시 지방계약법에 따라 지급)

(프로그램 위탁시 수용비 징수) 일부 위탁 또는 전체 위탁시 수용비는 단위학교에서 위탁기관에게 송금하는 강사료의 5% 이내로 한다. 다만 전체 위탁 시 행정지원인력을 사회적기업에서 지원하는 경우는 단위학교에서 위탁기관에게 송금하는 강사료의 3% 이내로 한다.

Ⅲ. 초등돌봄교실 위탁 운영

□ 돌봄교실 위탁 운영 현황

(단위: 실, 기준 : '15.5월)

구 분	돌봄 교실수	직영 운영	위탁 운영					비 고 (위탁율)
			사회적 기업	지역아 동센터	협동 조합	기 타	계	
2013년	618	566	46	5		1	52	8.4%
2014년	779	519	238	5	14	3	260	33.4%
2015년	733	333	372	15	13		400	54.6%
증 감	△46	△186	134	10	△1	△3	140	21.2%

* 협동조합 : 아이사랑협동조합(5교실,동북초,동신초), 정읍교육복지협동조합(2교실,정읍북초),
진안마을협동조합(6교실,동향초,마령초,백운초)

* 지역아동센터 : 아이들천국지역아동센터(9교실,금암초,전일초,전주초)
전미지역아동센터(1교실,미산초),도담지역아동센터(5교실,반월초,우전초)

* 기타 : 건강가정행복센터

□ 돌봄전담인력 현황

(단위: 실,명, 기준 : '15.5월)

구 분	돌봄전담인력 현황			비 고
	직 영	위탁	계	
2014년	506 초단시간 505명, 주20시간(이리초,무기적) 1명	233	739	
2015년	343명 배치 초단시간 343명	382	725	

□ 위탁기관별 위탁 운영 방법

- 대학주도 방과후학교 사회적기업
 - 공고 생략(교육부 시범사업) → 전자계약 추진
- 지역아동센터

- (운영 방식) 학교가 지역아동센터와 위탁운영에 관한 계약 등을 체결하고 학교 공간을 활용하여 돌봄교실 운영 또는 지역아동센터 공간을 활용하여 돌봄서비스 제공
 - (위탁 대상) 아동복지법에 의거 시·군·구에 신고 → 보건복지부 평가 통과 후 운영비 지원을 받는 지역아동센터(법인, 개인 모두 가능)로, 지역돌봄운영협의회에서 상호 위탁 가능한 기관을 협의
 - (위탁 기관 선정) 학교는 교육지원청에서 통보받은 위탁 가능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을 추진 ⇨ 학교 인근의 2개 이상의 지역아동센터를 위탁 운영 가능 기관으로 통보받은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공고 생략) → 전자계약 추진
 - 지역돌봄운영협의회에서 상호 위탁 가능한 기관이 미 선정된 경우 지역아동센터와의 위탁은 민간위탁에 준하여 운영→ 전자계약 추진
 - 시간대별 연계 운영 : 학교의 돌봄교실 이용후 지역아동센터를 시간대를 달리하여 이용(단, 지역아동센터 연계 참여시간은 1일 3시간 이상) ⇨ 돌봄서비스 간 이 동시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안전지도 계획 수립 등 안전관리 철저
- 협동조합
- 단위학교 및 지역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위탁 공고
 - 2015. 방과후학교 운영계획 및 길라잡이의 민간위탁 부분 적용

□ 돌봄교실 위탁 운영 유의사항

- 위탁계약 추진시 계약 단계에서 산출내역서, 인력 및 프로그램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약 체결
 - ⇨ 전체/부분 위탁 여부, 돌봄교실 수용비 유무 및 비율((3~5% 이내), 급·간식비 정산, 수익자부담경비 포함 위탁 여부 및 반환기준 등
- 위탁기관 소속 근로자에 대한 학교장의 직접적인 노무 관리 금지(불법파견 논란) ⇨ 학교↔위탁기관↔위탁기관 소속 근로자의 소통 체계를 매뉴얼화 하여 학교별 여건에 맞는 돌봄교실 운영의 효율적 방법 모색
- 돌봄교실 위탁 계약은 6개월 단위로 운영 ⇨ 계약 내용 미 변동시 6개월 연장하여 재계약(전자) 가능
- 위탁 계약 후에도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한 질 관리로 돌봄교실을 내실있게 운영
- 그 밖에 계약 금액 및 계약 방법에 따라 계약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는 해당하는 계약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

□ 돌봄교실 운영 유의사항 안내

○ 운영현황

(단위 : 교실, 명, %)

구 분	초등돌봄교실			학 생 이 용 율					비고
				학 생 수 (A)	참 여 학 생 수			이용률 (B/A)	
	오 후 돌봄	저녁 돌봄	계		오 후 돌봄	저녁 돌봄	계(B)		
2014년	668	111	779	100,038	13,965	1,777	15,742	15.7%	
2015년	664	69	733	98,959	14,662	1,089	15,751	15.9%	
(증감)	△4	△42	△46	△1,079	697	△688	9	0.2%	

* '15년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 : 21교실 운영

☞ 3~4학년 대상으로 돌봄교실 구축없이 일반실과 특별실을 활용하여 별도의 프로그램 및 간식 제공 없이 자원봉사자(근로자x, 위촉직o)들을 활용하여 학생 관리 위주로 운영

* 저녁돌봄 감소 사유 : 급식비 수익자부담 운영에 따른 수요 감소 및 희망학생 자연감소

○ 학교의 업무경감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학교직영 지양

- 돌봄교실 위탁 운영시 돌봄교실 운영비 5~10% 추가 지원(1교실 위탁 10%, 2교실 위탁 7%, 3교실 위탁 5% 가산 지원)

○ 돌봄교실 내 급·간식비 및 별도 프로그램 운영비는 수익자 부담 운영(저소득층 무료)

- 도시지역 및 농어촌 읍단위 학교(도시지역과 유사한 지역여건) 등
- 농어촌 면단위 학교도 인근학교와 연계하여 점진적으로 수익자부담으로 운영

○ 점심시간은 정규교육과정이므로 돌봄교실은 정규교육과정 이후에 운영

○ 돌봄교실은 학교교육활동으로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범위에 포함(위탁 포함)

☞ 학교장의 관리·감독 하에 이뤄지는 학교 안팎의 모든 교육활동은 공제회 대상임(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돌봄교실은 학부모 동행 귀가 원칙이나,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하교(돌봄교실 종료 후) 시간은 학교안전공제회 보상 범주임

☞ 위탁 계약시 수탁자는 영업배상 책임보험 의무가입

○ 돌봄전담인력은 주15시간 미만(소정근로시간) 근무, 시간당 인건비 17,000원~18,000원

☞ 내부교사의 전담인력 대체 인건비: 시간당 10,000원 이하

○ 돌봄전담인력의 계약서상의 근무시간(주15시간 미만)과 실제 근로시간을 일치하게 운영하고, 근무명령에 따라 초과한 근로시간은 초과근무 수당(시급의 100분의 50이상 가산) 지급

○ 돌봄전담인력은 해당학교의 방과후학교 내부강사로 참여 할수 없으며, 교무실무사 등 교육공무직원은 돌봄전담인력으로 참여 할수 없음



질의 응답 및 관련 사항 협의

(교육혁신과 균형발전 · 방과후 업무담당자)

I.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교실 운영 관련 Q & A

Q1. 방과후학교 계획 사후 승인 가능 여부

⇒ 학교운영위원회 승인을 받아 운영해야하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60조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사항과 사유를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함.

<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

<초·중등교육법>

제32조(기능) ① 국립·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6.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4(의견 수렴 등) ①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하려는 때에는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60조(심의결과의 시행 등) ① 국·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법 제32조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Q2. 채용신체검사서를 건강진단서로 대체 가능 여부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서식의 병력 요건이 첨부된 건강진단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1년간 유효)

Q3. 타학교 학생의 방과후학교 참여시 강사료 및 안전관리 처리방법

⇒ 본교학생과 동일하게 적용

Q4. 강사의 개별적인 사정으로 대체 프로그램 운영 시 절차 및 서류

⇒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대체 강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심의 받는 것이 효율적임

Q5. 저학년 지도 시 선행학습에 해당되는지 여부(민간위탁 포함)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초등 1, 2 학년 영어는 선행학습 금지 대상이 아님

Q6. 방과후학교 수업 중 사고에 대한 안전공제회 지원 여부

⇒ 학교장의 관리·감독 하에 이루어진다면 학교안전공제회 보상대상에 해당됨

Q7.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위해 구입한 교구의 소득공제 대상 여부

⇒ 재료구입비를 제외한 방과후학교 수강료(강사료, 수용비, 도서구입비)는 교육비 세액공제의 대상임. 여기서의 도서구입비라 함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학교 등에서 구입한 교재구입비와 학교 외에서 구입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도서의 구입비를 말함)

Q8. 완제품 간식의 보존식 보관

⇒ 돌봄교실 보존식은 식품 위생법령상 보존식 보관 의무 대상은 아님. 다만, 식중독 등 만일의 안전사고 발생시 그 원인이 명확히 규명될 수 있도록 급·간식 대상 인원에 상관없이 보존식 보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Q9. 저녁돌봄교실 운영 시 관리교원의 관리

⇒ 돌봄교실 운영에서 관리교원의 별도 관리 여부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결정할 사항이며 저녁돌봄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비상벨 설치, 저녁돌봄안전관리 보조인력(자원봉사자) 확보 등을 권장하며 학교 인근 지구대의 순찰 강화 등 지속 추진 필요

Q10. 대학주도 방과후학교 사회적기업의 경우, 민간위탁 운영 방식과의 차별점

⇒

기존의 방과후학교 위탁운영	대학주도 방과후학교 (예비)사회적기업 위탁운영 방식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전의견 수렴 2. 위탁 공고(1주일 이상) 3. 공모심사(방과후학교 소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심사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2개 이상의 업체가 응모할 것 (1개 업체만 응모한 경우 재공고) 나. 소위원회 적격성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심사 : 선정 대상기관의 프로그램, 강사 및 교재, 수강료 수준 등 -세부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비영리 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 설립 허가서, 비영리 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검토 • 비영리법인 취지와 의 적합성/ 수강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전의견 수렴 2. <u>생략가능(2015학년도에 한함)</u> 3. <u>공모심사(생략 가능)</u>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만, 위탁기관 선정을 위한 최종 결정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를 거쳐야 함. 단위학교 장은 필요에 따라 방과후학교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프로그램 내용, 프로그램 운영계획, 프로그램 수강료, 수용비, 교재, 강사 교통비 지원에 관한 사항, 대학주도 방과후학교 사회적기업과 강사 간 고용계약서, 연수확인서 또는 연수이수증 등을 검토할 수 있음.

<p>의 적정성/ '정관'의 사업목적 및 사업자 등록증을 통해 '방과후학교 관련 사업내용'의 포함 여부와 '수익 사업 승인 여부' 확인/ 수강료 적정성 확인</p> <p>② 영리법인 : '법인 설립 허가서' 및 '정관'상의 사업 목적에 방과후학교 관련 사업내용 명시 여부 확인/ '사업자 등록 여부' 및 '과세 실적' 등 확인/ 수강료 적정성 확인</p> <p>③ 공통사항 : 위탁운영업체 선정 심사 체크리스트에 의한 검토(방과후학교 가이드라인 매뉴얼 또는 시.도교육청의 방과후학교 운영계획 등 참조)</p> <p>4.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p> <p>5. 계약체결 : 단위학교장과 위탁기관 간</p> <p>6. 프로그램 운영</p> <p>7. 프로그램 운영결과 공개(홈페이지 등)</p> <p>가. 위탁업체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공개</p> <p>나. 수요자 만족도 조사 및 프로그램 평가 결과 공개</p>

<p><교원업무 간소화></p> <p>① 별도의 공모절차 생략</p> <p>② 회계처리 절차 간소화 →방과후학교 강사에게 개별적으로 강사로 지급하지 않고 대학주도 방과후학교 사회적기업에 일괄적으로 강사로 지급(송금)</p> <p>③ 대학주도 방과후학교 사회적기업에서 강사연수 실시</p> <p>④ 채용신체검사서 제출 생략 가능 →다만, 단위학교에서 필요시, 대학주도 방과후학교 사회적기업에 별도 요청 가능</p> <p>4.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p> <p>5. 계약체결 : 단위학교장과 위탁기관 간</p> <p>6. 프로그램 운영</p>
--

Q11. 민간위탁 시 수강료 징수 및 관리

- ⇒ 수강료는 선 수납을 원칙으로 하며 월 또는 기(팀)별로 징수할 수 있음
수강료 수납은 스쿨뱅킹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지로, 현금 수납 등 학교 여건에 따라 징수방법을 달리할 수 있음
- ※ 사회적기업에 위탁한 경우 학교장과 강사 개인과의 계약이 아니므로 강사 개인에게 수강료를 입금하지 않음

Q12. 민간위탁 시 수용비 관리

- ⇒ 수용비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수강료에 수용비를 포함하거나, 수강료와 수용비를 별도로 징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p>1. 수강료에 수용비를 포함하여 징수하는 경우</p> <p>① 수강료 징수</p> <p>② 징수된 수강료(수용비 포함)를 위탁계약을 맺은 기관에 일괄적으로 송금</p> <p>③ 위탁운영기관에게 수용비 청구</p> <p>* <u>일부위탁 또는 전체위탁 시</u> 수용비 한도 : <u>수강료의 5% 이내</u></p>

* 다만, 전체위탁 시 행정지원인력을 사회적기업에서 지원하는 경우 : 수강료의 3% 이내

※ 위탁운영의 경우 과도한 수용비를 위탁운영기관에게 요구하여 물의를 야기시키지 않도록 함. 전체위탁에 있어 대학·주도 방과학교 사회적기업에서 행정지원인력을 지원 받는 경우는 징수하는 수용비는 필요 최소한으로 함

④ 위탁운영기관에서 단위학교로 수용비 입금

2. 수강료와 수용비를 별도로 징수하는 경우

① 수강료와 수용비 징수

② 징수된 수강료를 위탁계약을 맺은 기관에 일괄적으로 송금

※ 수강료와 수용비를 별도로 징수하는 경우, 단위학교는 위탁계약을 체결한 기관에게 수강료만을 송금함. 별도의 수용비는 요구할 수 없음

Ⅱ. 행정 사항 안내

- 2015 방과후 학교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현장점검 실시(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민간위탁, 자유수강권) '15. 5.~6.
- 2015 방과후학교 운영 관련 부패방지 청렴정책 홍보 실시 결과 제출 : '15. 5. 18.까지
- 방과후학교(초등돌봄교실 포함) 운영 실태, 방과후학교 민간위탁 운영실태 전수 조사(예정) : 교육부에서 공문 발송, 단위학교에 안내

Memo



2015 방과후학교와 초등돌봄교실 운영 관련 학교장 및 업무담당자 연수 자료

발 행 일 : 2015년 5월 1일

발 행 처 : 전라북도교육청 교육혁신과

주 소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

전 화 : ☎063-239-3338
